

이재명 당선에 광주·전남 주요 현안사업 ‘탄력’ 기대

광주, AI·미래 모빌리티 신도시 중점
군공항 이전 ‘국가주도’ 실마리 찾나
전남, 국립의대·산단·재생에너지 확대
국정 반영 TF가동·세부안 발굴 착수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서 광주·전남 지역의 숙원사업들이 새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예 각각 7대 핵심 공약을 내걸고 지역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광주광역시

민주당은 광주 핵심 7대 공약으로 △인공지능(AI) 국가 시범도시 조성 △국가 주도 민군 통합 서남권 관문 공항 조성 △대한민국 대표 모빌리티 도시 조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3.0시대 선언 △영산강·광주천 수변 활력도시 조성 △국가 초고자기장 연구 인프라 구축 △서남권 메가시티 조성 등을 공언했다.

이중 광주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포함된 ‘인공지능(AI) 국가 시범도시’ 조성 사업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 대통령이

AX(인공지능 전환) 실증밸리 연계 초거대 AI 컴퓨팅센터 설립, AI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양자·휴머노이드 기반 테크산업 생태계 구축, 국가 AI 혁신연구원 설립 등을 통해 광주를 ‘국가 AI 시범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힌 바 있어서다.

실제 광주는 인공지능사관학교, 국가 AI데이터센터를 포함한 다수의 관련 기업이 들어서 있는 만큼 관련 실증 기반을 바탕으로 초거대 AI컴퓨팅센터 광주 설립 등 ‘메가샌드박스’ 시범 신도시 조성 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빛그린산단과 미래차 국가산단을 연계한 ‘미래 모빌리티 신도시’ 구상을 통한 자동차산업 고도화와 영산강 유역 물순환 체계 구축, 서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 건설, 광주·대구 달빛고속철도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광주군공항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주도’로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을 약속한 만큼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광주를 찾아 “광주군공항 이전을 돕기 위한 특별법 제정과 더불어 김산 무안 군수에 전화해 군공항 이전 반대 광고를

중단하라고 요청했다”며 “소음 피해를 줄이고 동네 주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등 합리적인 보상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광주도 본격적으로 날아올라야 한다. AI사업과 미래모빌리티, 군공항 이전 등 참으로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지역 현안이 새정부 국정 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라남도

전남 핵심 7대 공약으로는 △전남도민의 건강과 공공의료 획기적 개선 △여수 석유화학산업대전환을 통한 에코산단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 △해상풍력과 영농형 태양광 집중 육성을 통한 신재생 에너지 허브 건설 △미래 첨단전략산업 클러스터 조성 △동북아 관문 공항 육성과 초광역 교통망 확충 △미래 농수축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문화 허브 조성 등이 제시됐다.

이 중 전남은 공공의료 개선을 위한 전남 국립의대 추진과 여수산단 대전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국정 과제 채택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통합 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국립 목포대와 순천대의 조건부 대학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7년 개교를 목표로 행정절차도 밟고 있으나 계속된 의정갈등으로 뾰족한 해결책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 상태다.

이에 이 당선인은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강조하며 “지역 필수의료 확충은 국가의 책임”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는 등 지역 공공의료 개선을 향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여수국가산단의 친환경 전환 역시 주요 공약 중 하나다. 이 당선인은 특별법 제정, 공정 전환 비용 지원, 스마트 안전망 구축 등을 통해 석유화학 중심의 여수산단을 친환경 에코산단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안전 사고와 환경오염 등 산단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

새 정부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순풍이 불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현재 해상풍력단지 확대 및 영농형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 고속도로’ 및 RE100산업단지 조성,

해남 솔라시도 AI 슈퍼클러스터 조성 및 에너지 기본소득 도입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남도는 새 정부가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국정 운영에 돌입함에 따라 이날 5개 정책 분과별로 15개 실국이 참여하고 22개 시군이 함께하는 새정부 국정과제 대응 TF 첫 회의를 개최하고 전남 지역공약 세부사업 발굴 착수에 돌입했다.

김영록전라남도지사는 “이재명대통령 당선은 전남 미래 발전을 위한 절호의 기회다. 정부 2차 추경 추진이 예상되는 만큼 전남도 또한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갖춰야 한다”며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전남 7대 지역공약에 대한 세부 사업을 시군과 함께 조기 발굴해 정부부처와 국정과제 수립기관에 지속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도별 공약의 세부 내용 및 국정 과제 반영 여부는 국정과제 수립 과정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는 세부사업 조기 발굴 및 건의와 부처별 대응 전략 마련, 정치권 협조를 통해 지역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



대선 벽보 철거 광주 북구 오치2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과 관계자들이 4일 오치2동 일원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벽보를 철거하고 있다. 김영배 기자

李 대통령, 1728만표 득표 ‘역대 최다 기록’

제21대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49.42%의 최종 득표율로 당선됐다. 득표 수로는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개표가 100% 완료된 결과, 이 대통령은 49.42%,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41.15%,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8.34%를 각각 기록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0.98%,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0.10%였다.

이 대통령은 1728만7513표를 얻으며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얻은

최다 득표 기록(1639만4815표, 48.56%)을 뛰어넘었다.

다만 득표율이 과반에는 미치지 못하면서 최다 득표율 기록(18대 대선, 박근혜 전 대통령 51.55%)은 달성하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2위인 김 후보를 8.27%p(289만1874표) 차로 앞섰다.

역대 최대 격차 당선은 17대 대선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시 2위인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를 22.53%p 격차로 승리한 것이었다.

서울=김선욱 기자

李 대통령·김문수 선거비용 전액보전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되면서 후보별 선거비용 정산 절차도 시작된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각 후보자와 정당은 오는 23일까지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해야 한다.

정당 추천 후보자는 다음 달 14일까지, 무소속 후보자는 다음 달 3일까지 회계 보고를 마쳐야 한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제한액 588억5천여만원의 범위에서 선거 지출 비용을 보전해준다.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이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출

한 선거비용이 전액 보전된다. 10~15%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이 보전된다.

이에 따라 이번 대선에서 49.42%를 득표한 이재명 대통령과 41.15%를 얻은 국민의힘 김문수 전 후보는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민주노동당 권영국 전 후보는 득표율이 10%에 미치지 못해 비용을 보전받지 못한다.

나머지 무소속 후보와 중도 사퇴한 후보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비용 보전은 받을 수 없지만, 회계 보고서는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연합뉴스

‘보수강세’ 봉선동도 돌아섰다…李, 광주 득표율 84.77%

金 8.02%…지난 대선比 4.7%p ↓
전남 85.87% 등 호남 압도적 지지
‘불법 계엄·내란 세력’ 단호히 심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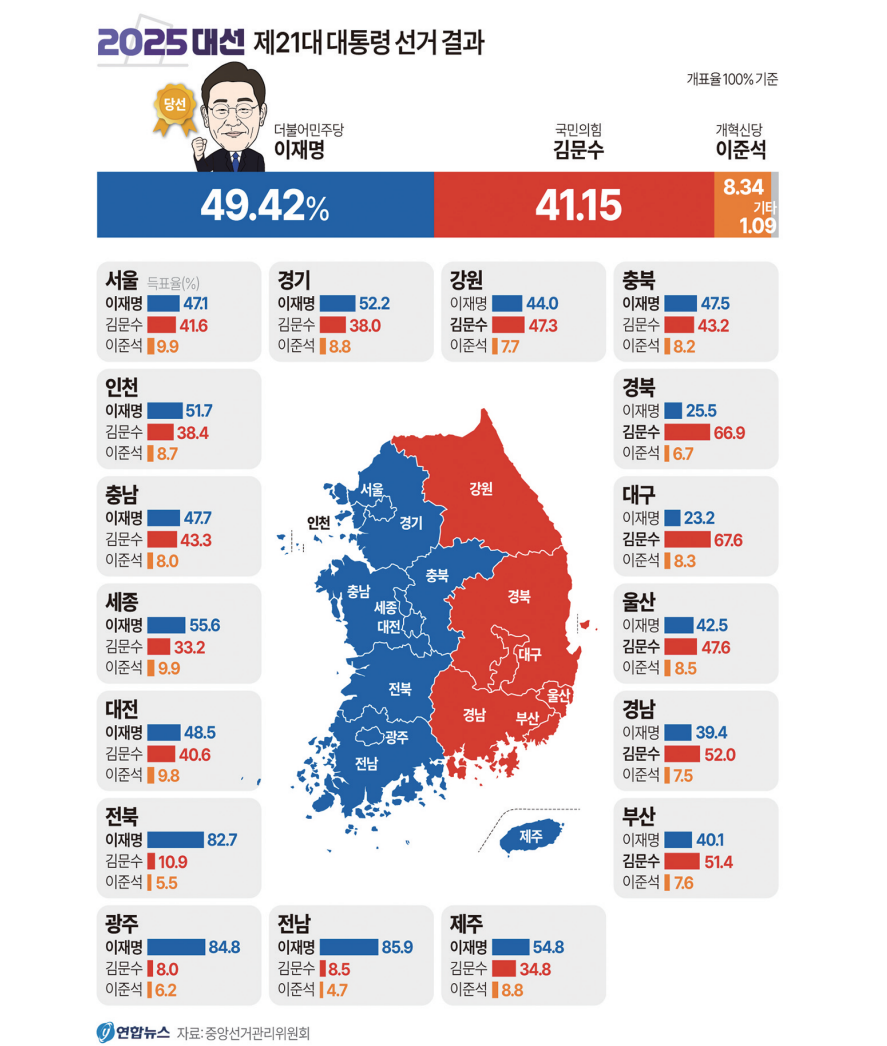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광주·전남 유권자들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게 저조한 지지를 보내며 탄핵 정국을 초래한 보수 세력을 강하게 심판했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상대적으로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던 지역들마저 등을 돌리며 보수 정당의 지역 기반이 크게 흔들렸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광주에서 84.77%, 전남에서 85.87%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광주 8.02%, 전남 8.54%에 그쳤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대 대선에서 각각 12.72%, 11.44%를 얻었던 것보다 하락한 수치로, 광주는 4.7%p, 전남은 2.9%p 줄었다.

광주 남구 봉선2동의 변화는 특히 눈에 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과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이 반영됐던 이 지역은 지난 대선에서 윤 후보에게 21.87%의 표를 줬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13.38% 득표에 그쳤다. 남구 전체 득표율(8.31%)보다는 여전히 높지만 보수 표심이 크게 이탈했다. 이는 내란 정국을 촉발한 국민의힘에 대한 실망과 개혁 보수에 대한 제한적 기대가 교차한 결과로 해석된다.

지난 3일 봉선2동 분투표 현장에서 만난 최모(73)씨는 “주변 많은 이들이 ‘상식과 공정’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며 “언론에서 보수세가 강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래도 다들 호남사람 아닌가. 투표 결과로 응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황모(70)씨는 “이 지역엔 ‘사이 보수’가 많은데, 이번엔 ‘국민 통합’이 최대 과제로 느껴졌다”며 “극단적 대립은 결국 나라를 망친다는 걸 깨달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흐름은 전남에서도 이어졌다. 광양시는 지난 대선에서 윤 후보가 15.82%를 얻었지만, 이번엔 김 후보가 12.01%에 그쳤다. 보수 득표율이 가장 높았던 금호동에서도 김 후보는 21.40%를 얻어 지난 대선(28.14%)보다 6.74%p 하락했다.

다만 김 후보가 유일하게 이재명 후보를 이긴 지역도 있다. 고흥군 도양읍 제4투표소에서 김 후보는 118표(50.21%)를 얻어 이 후보(108표)를 앞섰다. 이 투표소는 소록도에 위치해 있으며,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의 한센인 정책에 대한 보수 성향의 정서가 여전히 남아 있는 곳이다. 전남대·조선대 등 대학가에서도 보수 후보가 평균 대비 높은 지지를 얻었다. 전

남대 스포츠센터에 마련된 북구 용봉동 제4투표소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25.32%, 이준석 후보가 15.07%를 얻었다. 조선대 인근 서남동 투표소에서도 김문수(10.96%), 이준석(12.42%)이 모두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출구조사 결과와도 궤를 같이 한다.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에 따르면 이준석 후보는 전국 예상 득표율 7.7%로 3위에 머물렀지만, 20대 남성층에서는 무려 37.2%의 지지를 얻어 이재명 후보(24%)와 김문수 후보(36.9%)를 앞섰다. 전국 순위 3위 후보가 특정 연령대에서 1위를 기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다.

정성현 기자